



“尹 탄핵심판 최우선 심리”

현재, 사건 첫 변론준비기일 27일 오후 2시로 지정
정치권, 현재 공식인 헌법재판관 3명 임명에 속도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을 이달 27일 열기로 결정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남아 있는 탄핵심판 사건 가운데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 심리한다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소에서는 16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재판관 회의를 통해 탄핵심판 변론준비 기일을 오는 27일 금요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밝혔다.

탄핵심판 청구 변론 준비 기일은 변론을 하기에 앞서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을 불러 재판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고 재판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이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다른 탄핵심판 사건 중 윤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기로 했으며, 재판관들은 변론 준비 절차를 통해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 기록을 조기에 확보한 뒤 신속한 심리를 통해 진실을 밝히기로 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재판을 맡을 주심 재판관 지정과 관련해 16일 전자추첨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하고 비공개로 결정했으나, 주심 재판관에 정형식 재판관이 선정된 것으로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주심 재판관은 비공개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는 예외적으로 공개됐다.

증거 조사를 담당할 재판관은 이미선, 정형식 재판관이 지정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탄핵심판 청구 재판과 관련해 선임 헌법 연구관을 팀장으로 10명 남짓 규모의 태스크포스 팀(TF)을 구성하기로 했으며, TF팀은 탄핵심판 청구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사항을 검토해서 재판관들에게 판단 기초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헌법 재판관이 6명으로 재판관이 3명이 공식인 상태에서 진행되는 심리가 과연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유호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도 가능한 한 빨리 부족한 3명의 헌법 재판관이 임명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3명의 공식인 헌법재

판관의 임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민의힘에서는 조한창 변호사(전 대법원 재판연구관)를 후보자로 추천하였는데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계선 서울 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 서부지법 부장판사를 후보자로 추천하였는데, 두 추천후보자 모두 진보성향으로 분류된다.

이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23일과 24일 개최하기로 양 당간 잠정 합의하고, 30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추진하겠다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밝혔다.

현재 헌법재판관으로는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 재판관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중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은 정형식 재판관이 유일하다.

정 재판관은 고위법관 출신으로 뚜렷한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며,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진보로, 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은 중도로 분류되고 있다.

한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은 이번 윤대통령의 탄핵심판청구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16일 김제전통시장을 방문해 지역경제 안정과 도민 불안 해소를 위한 민생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은 김 지사가 김제전통시장 상인을 만나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다.

김관영 지사 “현재의 상황, 함께 이겨내자”

탄핵정국 속 불안 해소 위해 김제 전통시장서 민생 점검
도민 영향 최소화·민생 안정 위한 적극적인 역할 강조

전북특별자치도는 16일 김제전통시장을 방문해 지역경제 안정과 도민 불안 해소를 위한 민생 점검을 실시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날 시장을 찾은 상인 및 이용객들과 소통하며 탄핵정국으로 인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약속했다.

이번 방문은 경제 침체 상황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점검하고 도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김제전통시장 오인종 상인회장을 비롯한 상인 대표들이 참석한 간담회에서는 시장 내 주요 현안과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김관영 도지사는 현장에서 상인과 이용객들을 만나 격려하며 “현재의 상황을 함께 이겨내자”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김제 지역구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나인권·황영석 의원과 상인회장단 간담회를 통해 전통시장에 직면한 현안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간담회에서 오인종 상인회장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사태로 더욱 소비 심리가 위축될까 걱정하는 상인들이 많다”며, 전북자치도의 세심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김 도지사는 “도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김관영 도지사는 현장에서 도민들에게 연말연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지역 경제를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지역 상인들에게는 도 차원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도지사는 “우리 전북은 도민과 함께라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며, “탄핵정국으로 인한 도민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도정이 앞장서서 흔들림 없이 경제와 민생 안정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새만금청 “민생경제 안정
기업지원 업무 매진해달라”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공직기강 확립 및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날 회의를 통해 직원들에게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흔들림 없이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새만금에 입주한 기업이 경제 활동을 함께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입주기업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피고, 사전에 계획된 기업유치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기업이 안정적으로 투자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새만금개발청은 겨울철 대설·한파와 같은 재난 대비에 철저히 하고,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등 빈틈없는 재난안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올해 농업직불금 총 5745억원 연내 지급

어제부터 농업인 개인계좌로 통해 현금으로 순차적 지급
내년 농업직불금 6476억원 지급키로… 전년보다 증액

전북특별자치도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포함한 12개의 농업 직불성 사업에 대해 총 5,745억원을 연내에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농민 공익수당은 지난 9월 농가당 6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됐으며, 영농이 마무리된 이후 지급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은 16일부터 순차적으로 농업인 개인 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는 올해 초 각 시군 읍면동에서 직불금 사업별 신청접수 기간을 운

영한 뒤, 접수된 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자격 검증과 이행점검을 거쳐 최종 지급 대상자가 확정됐다.

공익직불제가 도입된 2020년 이후 농업직불금 지급 규모는 2020년 5,059억원에서 2024년 5,745억원으로 686억원 증가했다. 농가당 평균 지급액은 2020년 542만2,000원에서 2024년 638만3,000원으로 96만1,000원이 늘어났다.

또한, 2025년에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단가를 5% 인상하고, 친환경농업 직불금 중 논·밭의 지급단가는 70만원에

서 95만원으로, 전작작물직불금 중 밀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하계 조사료는 43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각각 인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올해보다 731억원이 증가한 6,476억원을 지원하며, 공익활동 확대와 농업인 소득 향상을 적극적으로 견인할 방침이다.

최재용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농업직불금 규모를 앞으로 대폭 확대하여 기후위기에 직면한 농촌 현실에서 환경보호를 위한 준수사항 이행 등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해 나가고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는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전북의
대한민국의
미래
새만금

전주매일 캠페인